

# “적법” vs “특혜”... 대정부질문 秋의혹 공방

외교·통일·안보 분야  
검찰, 국방부 압수수색  
정경두 국방 “위법 없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은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고, 이날 검찰은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휴가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발표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정 장관은 “연대통합 행정기록 체계 기록을 보면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를 거쳐서 했다. 다만 후속 행정 처리 절차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렇게 입장을 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병가를 보장받지 못한 다른 병사의 제보”를 언급하며 “(서씨는) 특혜가 맞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직접 확인한 사례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승인권자, 지휘관들이 병사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실이라면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정 장관은 “국방부가 추 장관을 엄호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며 “추 장관 측에서는 미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방부에서는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통역병 선발 과정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가”라는 질의를 받고는 “많은 의원들께서도 군에 자녀들을 보낸 경험이 있을텐데 우리 군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추 장관 아들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

런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며 “야당이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근 부장검사)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오전부터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 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 대상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 측의 아들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이번주 추경안 처리 물 건너가나

국민의힘, 속도전 반대... 민주당 ‘전국민 독감 백신’ 반영 검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지만 여야의 줄다리기에 이번 주 내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회는 15일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아직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 최대 쟁점인 ‘전국민 통신키트 2만원 지급’ 사업을 심의할 과방위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사보임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겪고 있어 언제 회의가 열릴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추경안 처리 일정을 두고 쯤처럼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민은 한시가 다

급하다. 정쟁 시간표가 아니라 민생 시간표에 맞춰 추경을 심사해야 한다”고 빠른 심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려 7조8000억원이다. 심의를 지연할 이유도 없지만, 눈 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추경 심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2~3일 만에 어떻게 통과시키나. 말도 안 된다”며 급주 내 처리 계획에 거들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해 온 ‘전국민 독감 무료 백신’ 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통신비 지급을 포함한 절충안 마련 가능성이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국민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고민해보기로 했다”며 “현재 약 2천만명인 무료접종분을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심상정 “방역 2단계부터 재난수당 지급해야”

정의당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5일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 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방역 2단계부터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따르고, 대부분 국민은 소득 감소·단절을 겪는다”며 “방역 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정기국회에서 제도화해야 한다”며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통신료) 감면 방안을 담아 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라며 “임대인과 피해단체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와 관련, “기업, 정부, 여당 그 누구도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눈곱만 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회사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겨냥해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때먹어 (고용인원)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다”며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까지 달아준 집권 여당이냐 물러라 하고 있으면 되느냐”고 따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양정숙·김홍걸·윤미향... 與 비례 꼬리무는 악재

양정숙 탈세·김홍걸 재산 축소 논란 이어 윤미향 기소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기소되자 여당에 당혹감이 묻어나고 있다. 개인 전제명 양정숙 의원에서 시작해 윤미향 의원을 거쳐 김홍걸 의원까지 비례대표 의원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다 급기야 윤 의원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당의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리스크는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인 지난 4월 말부터 현실이 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 신분 이었던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명의 신탁을 통한 탈세,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 임원 경력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양 의원의 해명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4월 29일 양 의원을 제명했다. 당시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검증과

정이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의원은 최근 부동산 자산 부실 신고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이다.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했다. 서울 강남 아파트는 처분했다고 했지만, 처남에게 증여한 방식이라 뒷말이 나왔다.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윤미향 의원의 경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회계 누락 의혹 등으로 지난 5월 정국을 뒤흔들었으나 여야의 개인 갈등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법 사건, 부동산 파동에 사안이 가려지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검찰은 석 달이 넘는 수사 끝에 지난 14일 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

무상 횡령 등 총 8가지 죄명으로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초대형 악재로 다시 부상했다. 문제가 불거질 당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지”고 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횡령 부분은 모두 해소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검찰 발표를 보면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도 보자”면서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전 국민 통신키트 지원 문제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전선이 추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 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 관계자는 “당이 할 수 있는 조처의 한계는 출당이나 제명인데 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어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입장이 난처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환영”  
이재명 “국민 숙원 앞당길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검찰의 잘못을 검찰 스스로가 수사하는 사이, 거대한 권력 집단이 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은 날로 커져 왔다”며 “공수처 도입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러는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김회재, 여수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7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 의원은 15일 “여수시 광역 BIS(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여수시는 교통약자 식별 및 정류장 음성인식 안내 서비스, 버스 잔여좌석 표시와 전자노선 등이 설치될 수 있어 교통약자나 정보취약이 어려워던 일반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7억원은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이라며 “행정적 지원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수시에는 시민들의 평등한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과 편의성 증진을 통해 안전하고 가시성이 높은 교통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여수시는 그동안 버스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던 것”이라며 “행정적 지원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